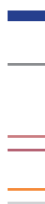


# 재정패널 소식지

2024년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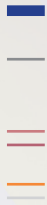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 재정패널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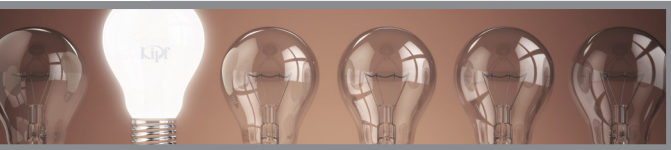
2024년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www.kipf.re.kr/panel/](http://www.kipf.re.kr/panel/)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 재정패널 2024년 소식지

재정패널 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조사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조세·복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 검증을 위해 설계된 패널조사입니다.

## Contents

재정패널 소개	04
16차년도 조사 결과	05
자료 이용안내	08
16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09
2024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15
2024년 재정패널 활용 연구	31

## 재정패널 소개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 ■ 재정패널 조사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종단조사
-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효과 검증, 가계 조세부담 및 복지수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설계
- 2024년 현재 17차년도 현장 조사 완료

### ■ 조사 대상

- 전국 15개 시·도에서 추출된 5,634가구 및 2021년 신규 추출한 4,555가구

### ■ 조사 영역

- 납세 및 복지, 지출 및 소득, 자산 및 부채, 경제활동상태, 소득공제내역, 사회 인식

### ■ 조사 특징

- 1) 납세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을 통한 자료 생성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
  - 항목별 소득공제액 또는 세액공제액, 결정세액 정보 제공
- 2) 안정적으로 패널을 유지하며 매년 높은 조사 성공률 보유
- 3) 개인의 사회 및 납세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수행

### ■ 표본 종류

- 기준원표본: 5,634가구(1차년도 추출 5,014가구+2차년도 대체추출 620가구)
- 통합표본: 9,318가구(14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기준원표본 3,948가구+분가가구 815가구+신규원표본 4,555가구)
  - 신규원표본: 14차년도에 구축한 신규 표본으로 횡단 및 종단 분석이 가능하고 계속하여 추적 조사하는 가구. 14차년도에 추출한 4,035가구와 15차년도에 대체추출한 520가구로 구성됨

# 16차년도 조사 결과

재정패널  
소식지

## 기존원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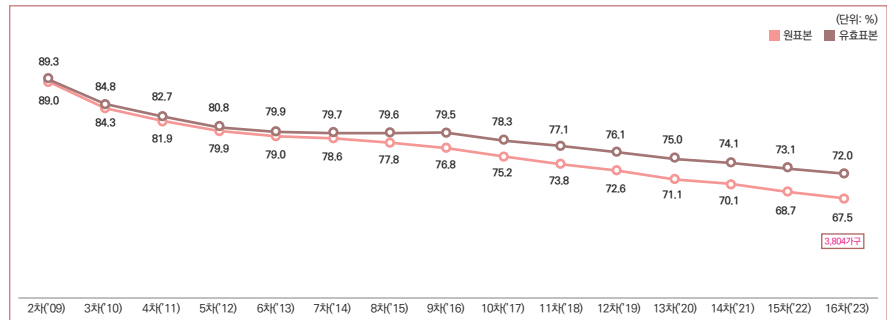
### ▶ 표본 구성

- 기존원표본 가구 수: 5,634가구
- 1차년도에 추출한 5,014가구와 2차년도에 대체추출한 620가주로 구성됨
- 지역의 규모에 따라 표본 가구 수를 배정하였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원표본 가구는 전체의 22.7%를 차지함

### ▶ 16차년도 기준 조사 성공률

- 원표본(기존원표본 및 2차 대체표본) 기준 성공률: 67.5%
- 유효원표본\* 기준 성공률: 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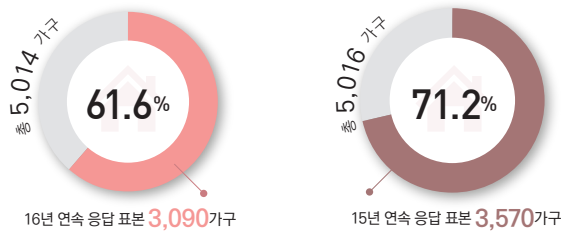
\* 기존원표본 가구 중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사망, 해외이민 등)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 ▶ 연속 조사 성공률

- 16년 연속 응답 가구: 3,090가구
  -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5,014가구 기준으로 16년 연속 응답한 가구는 3,090가구임
- 15년 연속 응답 가구: 3,570가구
  - 2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5,016가구 기준으로 15년 연속 응답한 가구는 3,570가구임
  - 2차년도 대체표본 구축에 따라 16년, 15년 연속 응답 가구에서 480가구 정도의 차이가 발생함
  - 재정패널 조사는 5,000가구 정도의 표본크기를 유지하고자 2차년도 탈락 표본에 대해서

대체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 620가구를 원표본으로 추가 구축함  
- 패널조사 특성상 2차년도 조사에서 표본이 대거 탈락하며 이후 패널이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임



## 통합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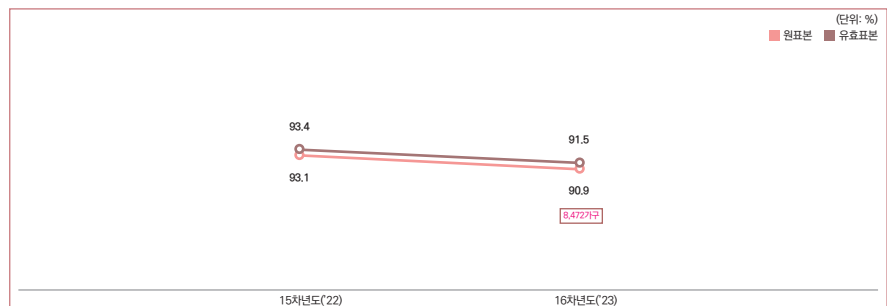
### ▶ 표본 구성

- 통합표본 가구 수: 9,318가구
- 14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기존원표본 3,948가구(1차년도 추출 3,480가구+2차년도 대체추출 468가구)와 분가가구 815가구, 그리고 신규원표본 4,555가구(14차년도 추출 4,035가구+15차년도 대체추출 520가구)로 구성됨

### ▶ 16차년도 기준 조사 성공률

- 원표본(기존원표본+2차 대체표본+분가표본+신규 원표본+15차 대체표본) 기준 성공률: 90.9%
- 유효원표본\* 기준 성공률: 91.5%

\* 통합표본 가구 중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사망, 해외이민 등)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 연속 조사 성공률

• 3년 연속 응답 가구: 7,948가구

- 14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8,798가구 기준으로 3년 연속 응답한 가구는 7,948가구임

• 2년 연속 응답 가구: 8,672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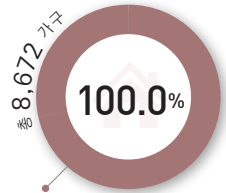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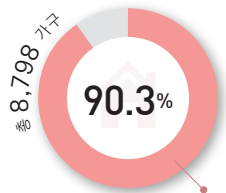
- 15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8,672가구 기준으로 2년 연속 응답한 가구는 8,672가구임

- 15차년도 대체표본 구축에 따라 3년, 2년 연속 응답 가구에서 724가구 정도의 차이가 발생함

- 재정패널 조사는 10년 이상 원표본 변동 없이 추적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생기는 표본의 마모

문제와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14차년도에 약 4,000가구 정도를 신규원표본으로 추출함

- 신규원표본 중 15차년도 탈락 표본에 대해서 대체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 520가구를 신규원표본으로 추가 구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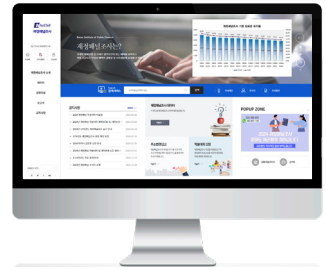
## 자료 이용안내

### 공식자료

- ▶ 제공 범위: 1~15차 데이터, 기초분석보고서, 유저가이드, 통합코드북, 통합설문지
- ▶ 제공 방식: 공식 홈페이지 및 KOSIS를 통한 주요 결과 공개
- ▶ 2024년 12월 6일 16차 재정패널 데이터 공개 (예정)

### 자료 다운로드

- ▶ 재정패널조사 홈페이지 ▶ 데이터 ▶ 데이터 (다운로드)
- ▶ 간단한 연구 관련 정보 입력 후 자료 및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 ▶ <https://www.kipf.re.kr/panel/>



### SMART NaSTaB

- ▶ 데이터 가공용 STATA 프로그램
  - 재정패널 자료의 가공 시간을 단축시키고, 오류 없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구축함
- ▶ 프로그램 실행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
  - 연도별, 가구별, 가구원별 데이터 병합
  - 소득 및 지출 등 생성 변수 추출
- ▶ Smart NaSTaB 다운로드 방법
  - 재정패널조사 홈페이지 ▶ 데이터 ▶ 16차년도 Smart NaSTaB (다운로드)
- ▶ 특이사항
  - STATA 13.0 버전 이상에서 구동 가능

### 데이터 활용안내

- ▶ 데이터 활용을 위한 예제파일 제공
  - 재정패널 자료 분석 시 자주 사용되는 내용에 대해 STATA 및 R 예제파일 첨부
  - 가구 데이터와 가구원 데이터 병합 방법, 패널 데이터 가공 방법 등 안내
- ▶ 예제파일 다운로드
  - 재정패널조사 홈페이지 ▶ 설명자료 ▶ 데이터 활용안내 (다운로드)

# 16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재정패널  
소식지

## 가구원 부가조사

- 부가조사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사하도록 설계됨
- 16차년도(2023년)에는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과 유기동물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함

## 반려동물 양육

- 반려동물 양육 여부
  - 반려동물을 '현재 기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2.2%로 나타남
  - 반려동물을 '현재 기르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8.6%로 가장 높음

〈표 1〉 반려동물 양육 여부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4,665명)

구분	항목	(%)
반려동물 양육 여부	현재 기르고 있다	12.2
	현재는 없지만 이전에 기른 경험이 있다	18.6
	현재도 이전에도 기른 경험이 없다	69.2
분양 받은 경로 (복수 응답)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	48.6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	11.0
	펫샵 등 동물판매업소에서 구입함	24.2
	개인 브리더에게서 구입함	3.1
	지방자치단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함	3.2
	동물보호단체 등 사설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함	1.6
	길에서 구조함	7.1
	기타	1.3

## 16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 • 반려동물 관련 비용

- 반려동물을 '현재 기르고 있다'는 응답자 중 '반려동물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3%이며 월평균 지출 비용은 9.7만원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과 관련된 비용 중 '먹이/사료'에 지출이 8.1%로 가장 높음

〈표 2〉 반려동물 관련 비용

(base: 〈표 1〉 '현재 기르고 있다' 응답자 1,785명)

구분		해당 가구원		전체 가구원 평균 금액(만원)	
		비율(%)	금액(만원)		
반려동물 관련 총비용		월평균	8.3	9.7	0.8
세부 내역	먹이/사료	월평균	8.1	4.7	0.4
	사육공간 유지/관리	월평균	3.9	2.7	0.1
	질병 예방/치료	월평균	5.9	3.8	0.2
	기타(액세서리, 의류 등)	월평균	4.0	2.4	0.1

### ■ 유실·유기동물 문제

#### • 유실·유기동물 발생 문제 및 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

- 유실·유기동물 문제 심각성의 경우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4.4%로 나타남
- 유실·유기동물 발생 원인의 경우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낮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0.2%로 가장 높음
- 유실·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정책의 경우 '유기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38.2%로 가장 높음
- 유실·유기동물 관리 비용의 경우 '유실·유기 행위를 한 사람만 부담' 응답이 48.9%로 가장 높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부담' 응답이 40.9%로 나타남

〈표 3〉 유실·유기동물 문제 평가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4,665명)

구분	항목	%
유실·유기동물 문제 심각성	전혀 심각하지 않다	0.2
	별로 심각하지 않다	5.5
	보통이다	29.9
	다소 심각하다	44.9
	매우 심각하다	19.5
유기동물 발생 원인 (복수 응답)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낮아서	30.2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0.3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서	13.6
	야외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새끼들이 야생에 유입되어서	6.5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책임의식이 부족해서	22.7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시스템이나 동반 시설 등 사회적 기반이 부족해서	6.6
	기타	0.1
유실·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유기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38.2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기준 강화	17.4
	유실·유기동물의 포획 강화	8.5
	동물등록제 확대 강화	19.3
	반려동물 사육 및 책임에 대한 교육 강화	10.9
	반려동물 중성화수술 확대 장려	5.6
	기타	0.1
유실·유기동물 관리 비용 지불 주체	유실·유기 행위를 한 사람만 부담	48.9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부담	40.9
	국민 모두가 부담	7.2
	유실·유기동물의 관리 불필요(비용 지불 없음)	2.5
	기타	0.5

## 16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 ■ 유실·유기동물 관리 정책 옵션별 선호도

- 유실·유기동물 관리 정책을 속성별로 차이를 두고 12가지 옵션을 제시하여 선호도를 조사함
- 유실·유기동물 정책의 속성: 사업내용, 사업주체, 기대효과, 응답자의 부담액

#### 1. 사업내용

- ① 유기동물 포획: 반려동물이 유기된 이후 사후적 조치를 강화  
(예시: 유기동물 포획 및 포획된 동물의 중성화 수술, 입양 및 안락사 등)
- ② 유기 예방정책: 반려동물이 유기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를 강화  
(예시: 반려동물 구입 및 입양 시 사전교육, 반려동물 등록 유도, 반려동물 인수제\*, 반려동물 중성화 지원사업 등)

\* 반려동물 인수제: 주인이 군입대, 교도소 수감,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동물보호센터에 이전하는 제도

- ③ 법적 규제·감시: 동물등록 의무화, 동물 유기 불법화 등을 강제하며 위반 시 벌금 등 처벌이 가해짐

#### 2. 사업주체

- ① 공공: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 ② 민간: 사설업체나 협회 등의 민간단체

#### 3. 기대효과

- 해당 정책 시행 시, '유기동물 10만마리 기준, 매년 00%의 유기동물이 감소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기대효과

#### 4. 부담액

- 해당 정책이 시행될 때 응답자가 지불하게 될 금전적인 비용(연간 기준, 가구마다 소득세에 부과됨)

〈표 4〉 정책 옵션별 선호도

(base: 가구원 의식조사 응답자 14,665명)

구분	사업내용	사업주체	기대효과	가구 기준 연간 부담액	선호도(%)
옵션 1	유기동물포획	민간	30% 감소	50,000원	33.2
	유기동물포획	공공	30% 감소	100,000원	12.6
	선호하는 대안이 없음				54.3
옵션 2	유기 예방정책	공공	70% 감소	10,000원	32.6
	유기동물포획	민간	30% 감소	5,000원	36.6
	선호하는 대안이 없음				30.8
옵션 3	유기동물포획	공공	30% 감소	100,000원	7.9
	유기 예방정책	공공	70% 감소	10,000원	55.2
	선호하는 대안이 없음				37.0
옵션 4	유기동물포획	공공	50% 감소	50,000원	11.0
	법적규제/감시	공공	30% 감소	10,000원	51.7
	선호하는 대안이 없음				37.3
옵션 5	유기 예방정책	공공	30% 감소	10,000원	48.7
	유기동물포획	공공	50% 감소	100,000원	12.7
	선호하는 대안이 없음				38.6
옵션 6	유기 예방정책	민간	70% 감소	10,000원	28.5
	유기동물포획	민간	50% 감소	5,000원	39.5
	선호하는 대안이 없음				32.0
옵션 7	유기 예방정책	민간	50% 감소	100,000원	22.7
	유기 예방정책	공공	20% 감소	100,000원	14.9
	선호하는 대안이 없음				62.4

## 16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구분	사업내용	사업주체	기대효과	가구 기준 연간 부담액	선호도(%)
옵션 8	유기동물포획	민간	30% 감소	10,000원	42.3
	유기 예방정책	공공	30% 감소	50,000원	18.0
	선호하는 대안이 없음				39.7
옵션 9	유기 예방정책	공공	50% 감소	50,000원	14.0
	유기동물포획	공공	50% 감소	10,000원	49.2
	선호하는 대안이 없음				36.7
옵션 10	법적규제/감시	공공	30% 감소	100,000원	24.4
	유기동물포획	민간	20% 감소	100,000원	13.4
	선호하는 대안이 없음				62.2
옵션 11	법적규제/감시	공공	30% 감소	10,000원	48.8
	유기 예방정책	공공	20% 감소	50,000원	12.2
	선호하는 대안이 없음				39.0
옵션 12	유기동물포획	공공	30% 감소	50,000원	14.3
	유기동물포획	민간	20% 감소	5,000원	50.6
	선호하는 대안이 없음				35.1

\* 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는 2024년 12월 6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상기 기초통계 값은 데이터 보완 및 정제과정을 통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월 공개예정인 '16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 » I-1

### 가계 교육비 지출 동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백승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이 연구는 1965~74년 및 1975~84년 출생집단에 해당하는 가구주의 자녀 사교육비 지출 양상에 주목하였다. 재정패널조사 6~16차 데이터를 이용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30~40대 연령대의 출생집단을 설정하였고, 두 출생집단이 동일 연령대에 속하는 10년 전후 시점 간 비교를 통해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 지출 수준을 검토하였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의 계층적 결합에 따라 자녀 사교육비 지출의 위계적 구조가 재생산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전후 출생집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른 자녀 사교육비 지출의 위계성이 확인되는 동시에 고소득·고자산 대비 중소득·중자산 간의 격차는 좁혀지는 수렴적 패턴을 보였다. 총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은 2012년 1965~74년 출생집단의 경우 10분위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2022년 1975~84년 출생집단에서는 소득 1분위가 가장 높았다. 또한 2012년 1965~74년 출생집단 대비 2022년 1975~84년 출생집단의 금융자산을 비교하면, 1자녀 가구 2.09배, 2자녀 가구 1.60배, 3자녀 이상 가구 1.33배의 차이를 보였다. 순자산 상위 10분위와 하위 2분위 간 자산은 2012년 1965~74년 출생집단 33.34배, 2022년 1975~84년 출생집단 18.90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순자산 10분위와 2분위 간 사교육비 지출은 2012년 1965~74년 출생집단 2.96배, 2022년 1975~84년 출생집단 2.18배였다. 한편 계층 간 소득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보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할 때 자녀 사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컸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한편 서울, 인천·경기, 비수도권(광역시),

비수도권(일반시), 비수도권(군) 순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위계성을 보여 거주지역 중심성에 부합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의 계층적 결합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격차가 재생산되는 사회구조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 1-2

### 유기동물 대응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선호 및 지불의사금액 연구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는 유기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화하는 데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줌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책의 특성에 따라 지불의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추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책 선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문항을 추가한 16차년도 「재정패널」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부가 조사는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과 관련한 일반 현황 문항 및 국민의식 문항,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한 선택실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실험에서의 정책속성은 사업내용(유기동물포획, 유기예방정책, 법적 규제·감사)과 사업주체(공공, 민간), 유기동물 감소 기대효과 및 가구 부담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 법적 규제를 포획이나 예방정책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제도에 비해 연간 3만원가량 더 부담을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획이나 예방정책에 있어 시행 주체는 민간일 경우 가구의 지불의사액이 대략 8천 5백원 정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기동물이 매년 10%p 추가 감소할 때마다 3천원 수준으로 연간비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 I-3

##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의 등장: 고령자의 소득·소비지출 및 뉴스 미디어 이용 변화를 중심으로

박대근 차의과학대학교 조교수

박노일 차의과학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고령 인구집단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의 등장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10년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데이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25세부터 75세 이상까지 총 6개 인구집단별 소득과 소비패턴, 뉴스 미디어 이용 채널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고령자 집단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관찰되었다. 1) 55~74세 연령대에서 재산소득의 유의미한 증가, 2) 여가 및 통신 지출의 확대, 3) 모바일 인터넷 사용의 급격한 증가가 55~74세 연령대에서 두드러졌으며, 비고령자 집단과의 격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45~54세 대비 55~64세 그룹의 재정적 특성과 뉴스 미디어 이용 특성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가지출과 다른 변수 간의 강한 상관관계, 모바일 인터넷뉴스이용비율과 포털뉴스이용비율 간의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40대와 유사한 55~64세 집단의 양성한 문화, 스포츠, 여가활동과 모바일 및 인터넷 뉴스 미디어 이용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추세를 제시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자 관련 정책 수립, 산업 전략 개발,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고령화 사회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I-1

###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박명호 홍익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는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재정패널 조사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2022년까지 3개 회계연도 동안 총 8차에 걸쳐 약 183.3조원의 세출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정부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피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은 가구총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약 1.8%(2020년)와 1.4%(2021년)씩 개선하였고, 소득5분위배율을 9.9%(2020년)와 7.9%(2021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금이 일정 정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녔음을 보여준다. 다만, 정부의 다른 공적이전지출과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시 지원금 1단위당 효과는 낮았던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정부 지원금의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2

**주관적 안녕감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강민조 동덕여자대학교 조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주관적 안녕감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보다 납세의식이 높을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의 어떠한 측면이 납세의식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주관적 안녕감과 납세의식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주관적 행복감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라는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여 수행되었다.

제15차 재정패널 데이터의 가구원 의식조사에는 행복에 관한 5가지의 설문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구성요소들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주관적 안녕감을 정서적 안녕감(최근 일주일의 행복, 최근 일주일의 걱정, 최근 일주일의 우울)과 인지적 안녕감(최근 삶의 만족도, 현재 하는 일의 가치)으로 구분한 다음, 주관적 안녕감의 구성요소들이 가상적 조세상황에서의 성실신고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주관적 안녕감은 전반적으로 납세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녕감 가운데에는 최근 일주일의 우울감이 가장 두드러진 요인이었으며, 인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현재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납세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단일 측정치로 널리 활용되었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납세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납세순응의 심리적 동기와 관련하여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비세무적 요인을 새롭게 조망하였다. 특히, 직업으로부터 느끼는 성취감이 납세의식 형성에 기여하는 행복의 주된 구성요소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충만한 삶을 사는 납세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납세의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II-3

**복지 인식 수준과 납세의 적정성 관계 분석  
-코로나19 지원금 수혜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슬이** 연세대학교 박사수로  
**신영호**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본 연구는 복지인식이 납세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지원금 수혜 경험이 이 관계를 조절하는지 경험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조세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평등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민의 세금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조세 정책과 사회복지 제도의 효율성과 정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복지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납세의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과 이러한 관계에 코로나19 지원금 수혜경험이 조절효과를 갖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상기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납세의향 변수를 새롭게 도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인식이 높을수록 납세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지원금 수혜 경험이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는 조세정책과 사회복지 제도 설계 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고려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보편적 복지 혜택이 납세의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는 납세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III-1

### 소득세의 과표구간 상승효과(bracket creep)의 추정과 영향 분석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명목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세 실효세부담이 증가하는 물가세 효과, 즉 과표구간 상승효과(bracket creep)를 추정하는 것이 주된 연구목적이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플레이션 외에도 실질소득 증가 과세소득의 상대분배격차 변화 등에 의해서도 과표가 증가하기도 한다. 이들 3가지 효과를 합쳐 넓은 의미에서의 과표 상승효과(fiscal drag)라고 한다. fiscal drag 효과에서 bracket creep 효과를 구별하기 위해 가상적으로 소비자물가연동장치를 도입한 경우의 과표 변화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총효과(fiscal drag)와 정량비교를 통해 협의의 과표구간 상승효과를 분해하여 추정하였다. bracket creep 효과는 과표미달 구간에서 (+) 과표구간으로 이동하는 부분과, (+) 과표구간에서 상위의 과표구간으로 이동하는 2가지 효과로 구성된다. 2014년과 2022년의 재정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과표구간 상승효과는 주로 (+) 과표구간에서 상위 과표구간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지배적이고, 과표미달 구간에서 (+) 과표구간으로 이동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저세율구간(세율 6%)에서 세율 15%와 24%의 2~3구간으로 확장이동하는 효과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4~2022년 사이에 광의의 과표 상승효과(fiscal drag)를 통해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3.5%에서 4.3%로 증가하였다. 분해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4~2022년 사이의 세법개정효과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여도 0.1%p를 제외한 0.7%p 중에서 0.4%p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촉발된 명목소득 증가로 인한 bracket creep 효과에 기인하며, 나머지 0.3%p는 실질소득 증가와 과세소득 상대분포 변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 »III-2

## 한국 가구 소득 및 자산 구성비의 변화 추이: 2007년-2022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박호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박정민 서울대학교 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가구의 소득과 자산 구성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나아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재정패널 제1차-제16차 데이터(2007년~2022년)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은 총 77,011 사례를 포함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니계수를 구하고, 엡킨슨 지수 및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를 산출하여 가구 소득 및 자산의 전반적인 불평등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가구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도는 정체, 혹은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계층에 따른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 소득 및 자산불평등의 추이와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 연구의 결과는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의 지식기반을 제공한다.

### »III-3

##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연금 세제 개편 필요성 검토: 연금 공제와 가구 저축 간의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가운데 노후 소득 안정화를 위한 대안으로 사적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의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가구가 사적연금에 가입하거나 추가로 납입하더라도 총저축이 증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연 연금이 저축을 구축하였는지, 또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는지 사적연금과 저축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사적연금과 가구 저축 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분석에서 연금 납입액과 연금 공제액이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금이 저축을 구축하는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금혜택을 이유로 연금에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하기로 결정한 가구에서 적어도 저축을 줄여서 연금을 납입하는 형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사적연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세제개편을 제안한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금혜택은 저축을 구축하지 않고 가구의 은퇴 이후 자산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가구의 은퇴 이후 노후 대비에 더욱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며, 가구의 연금 납입과 저축은 기업의 투자재원이 되므로 가구의 연금 납입을 장려하는 세제 정책은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유효한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V-1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 상향 효과분석:  
50대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추가를 중심으로**

정원석 동아대학교 조교수  
김영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50세 이상자에 대한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납입액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된 정책이 납세자들의 연금계좌 납입행태에 미친 영향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금계좌 납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소득과 자산 등에 의해 결정이 되며, 새로운 정책은 동 정책의 영향을 받는 50세 이상 대상자들의 연금계좌 납입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금자산 적립이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연금자산 적립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 »IV-2

## 시간선호도에 따른 개인연금 수요 분석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위험선호도와 시간선호도는 깊이 관여되는 동시에 연구자에게 관측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위험선호도와 달리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시간선호도를 측정해 개인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 분석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재정패널자료(2020~2022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시간선호도가 높을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선호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측정오류)를 최소화한 뒤에 추가 분석한 결과, 그리고 내생성을 통제한 성향점수매칭(PSM)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도 동일했다. 다만,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시간선호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가상의 설문 사용한 것은 연구의 한계다.

## »IV-3

**소득격차에 따른 고용 안정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김승희 충북대학교 겸임교수

본 연구는 소득격차에 따른 고용 안정이 조세순응과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용 안정이 중요한 요인으로는 안정된 고용은 사회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높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공적부조와 같은 소비적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늘려 노동시장에 의한 1차 분배를 보장할 수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복지재정과 국민의 조세부담에 합리적인 조화와 효율적 운용에 있다.

소득격차에 따른 고용안정이 조세순응과 복지를 위한 증세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수집한 '15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한 결과, 조세순응 변수로 본인의 세금 납부 정도는 평균 3.39, 중위수 3.0으로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조세 혜택은 평균 2.72, 중위수 3.00으로 낮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의향으로는 평균 1.44 중위수 1.00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격차에 따른 고용안정이 세금 납부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1의 분석 결과로, 근로 활동 소득자들의 소득격차의 차이가 높고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세부담을 하고 있으며 반대로 소득격차의 차이가 낮고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세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에 따른 고용안정이 정부의 혜택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2의 분석 결과로, 근로 활동 소득자와 사업 활동 소득자 모두에서 소득격차 차이가 높을수록 낮은 정부혜택을

받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적절한 수준 이상의 정부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에 따른 고용 안정이 복지 증세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3의 분석 결과로, 근로 활동 소득자와 사업 활동 소득자에서 소득격차 차이가 높을수록 복지 증세에 상반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심변수인 상호작용 변수에서 소득격차와 근로소득이 높은 근로 소득 활동자들은 양(+)<sup>1</sup>의 부호로 복지를 위한 증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 소득 활동에서는 (+)<sup>2</sup>양의 부호를 보이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근로 소득 활동과 사업 소득 활동 등의 고용이 안정되어 소득 격차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감소시킴으로 인하여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된다. 활발한 근로 소득 활동과 사업 소득 활동은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경제와 사회적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소득격차에 대응하는 안정된 고용정책을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미래 경제와 사회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2024년

# 재정패널 활용 연구

최근 1년간 발표된 재정패널 활용 연구 목록입니다.

[학위논문]

제목	저자	비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을 이용한 가구의 소비지출 결정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김채현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노동시장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관한 세 가지 실증 연구	서영빈	학위논문(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정책효과에 관한 세 가지 연구 : 노후소득보장과 저출산 정책을 중심으로	이경배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한국인의 위험회피성향에 따른 부동산 자산 선호에 관한 연구	이정훈	학위논문(석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전공
기초연금이 노인빈곤가구의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장윤선	학위논문(석사):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정상훈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전공

\* 최근 1년간 재정패널을 활용한 학위논문들의 목록입니다.

## [학술지논문]

제목	저자	비고
소득세율구조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가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평가에 미친 영향	강민조 신영호	세무와 회계 연구, 13(3), 89-124.
가계패널조사 저축과 순자산 변화의 불일치에 관하여	김대환	금융연구, 38(2), 71-119.
위험선호는 자산을 증대시키는가?: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김대환 이동화	부동산연구, 34(1), 23-39.
Analysis of Korean's Attitudes toward Risk	김대환 이봉주	리스크관리연구, 34(4), 37-76.
보유세 부담이 고령 가구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김병남 송헌재	재정학연구, 17(1), 1-25.
2021년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현황 및 추이	김수영 정성훈 박은철	보건행정학회지, 33(3), 363-369.
한국사회 소득, 자산, 부채의 연령, 기간, 코호트에 따른 변화 추이: 한국재정패널 2007년-2021년 자료를 활용한 중단연구	박호준 박정민	사회복지연구, 55(1), 183-206.
가구의 예상 국민연금소득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서영빈 송헌재	응용경제, 26(1), 5-22.
자산분배 구조의 분포 특성과 재산과세의 재분배 효과	성명재	재정학연구, 16(4), 33-87.
인구구조 변화가 수혜-부담 체계에 미치는 영향	유혜미	경제학연구, 72(2), 69-94.
재산세가 가구의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대 간 비교	이건우	미래성장연구, 9(2), 29-54.
납세자의 조세 공정성 인식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	이경호	GRI연구논총, 25(4), 287-308.
한국에서의 자산 축적의 요인 분해와 자산 격차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전병유	한국사회정책, 30(4), 3-34.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 가구의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 지출에 미치는 효과	최동욱 김도형 이창근 이용관	재정학연구, 16(4), 129-148.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홍우형 이상엽	재정정책논집, 26(3), 71-109.

\* 최근 1년간 학술지에 게재된 재정패널 활용 연구들의 목록입니다.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발 행 일 : 2024. 11. 30.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배포문의 : panel@kipf.re.kr, 044-414-2473/2411

홈페이지 : www.kipf.re.kr/panel/